



국회의원 김 한 표

보 도 자 료

경남 거제시
2013. 10. 14(월)
산업통상자원위원회
운영위원회

[국회]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.02)784-4760~2 Fax.02)788-0170
[거제]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-21번지 명성빌딩 4층 Tel.055)632-7822 Fax.055)638-4553
담당 : 박재성보좌관(010-6363-2802)

전력난, 정부의 '전력 수요예측 실패'와 '공급능력 확보 실패'

- 『3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』 717만kw 오차 (오차율 11%) -
- 2013년 가동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 시설 준공 지연 또는 건설 취소 -

- 지난 여름철에는, 2011년 9·15' 순환정전에 이어 두 번째로 순환정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으나,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계는 물론 소규모 상공인을 포함한 온 국민의 절전 동참으로 전력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.
- 찜통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부채질만 하면서, 전력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김한표 의원이 확인 및 분석해 본 결과, 정부가 추진한 『전력수급 기본계획』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로 밝혀졌다.
-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(경남 거제시, 새누리당 원내부대표)이,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, 전력난 발생의 근거를 분석한 결과, 정부가 추진한 『전력수급기본계획』 중 전력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을 확인하였다.

즉,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, 2012년 최대전력수요 6,712만kw를 예측하였으나, 실제 최대수요는 7,429만kw로써,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. 오차율은 11%이다.

더욱이, 2013년 2월에 발표한 「6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」에서, 2013년 하절기 최대수요는 7,899만kw로 예측하였으나, 지난 8월19일에 8,008만kw를 기록하여 109만kw의 오차가 발생함으로써,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.

-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,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 공급 능력 확충의 실패라 할수 있다.

다시 말해서,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3년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 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. 특히, 준공 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%를 차지하고 있다. 즉,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‘건설의향 평가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

- 김한표 의원은, “정부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는데, 내년 여름이후에는 올해와 같이 ‘후진적인 전력난’이 재발되지 않도록 ‘전력수급기본계획’ 수립시 「예측수요 오차」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”고 말하였다.

또한, “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,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함께,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「평가절차의 공정성 확보」와 「미이행시 처벌 강화」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. 즉,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경우, 발전사업자에 대해 벌칙 및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”고 말하였다.

- 김의원은, “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,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.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전력수급기본계획은, 산업부장관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의해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2년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것으로, ‘전력수급의 기본방향’과 ‘장기전망’, ‘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’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